

김일성의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의 스탈린주의적 기원과 정치경제학적 성격*

윤철기**

현존 사회주의에 관한 주요한 이론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가치법칙의 작동 여부에 관한 것이다. 북한 역시 한국전쟁이후 지배체제의 형성과정에서 가치법칙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이론적 논쟁은 정치적 노선투쟁으로 비화되었으며, 김일성이 1969년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를 발표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김일성의 테제는 가치법칙에 대한 스탈린의 1951년 발표했던 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김일성의 테제는 북한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 해석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테제가 발표된 이유는 교환과 가치 범주의 도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의 심각한 한계 때문이다. 물론 현존 사회주의의 교환과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정치권력이 가격결정에 개입했고 정치는 의도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초래했다. 이점은 독점자본주의에서의 특성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하지만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교환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시스템의 구조적(혹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정치적’ 그리고 ‘구조적’ 이유 때문에 수정된 형태로 작동한다고 규정하고자 한다.

주제어: 가치법칙, 현존 사회주의의 가치법칙,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 스탈린주의, 가치법칙의 수정

* 이 연구는 2020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부교수.

1. 문제 제기

현존 사회주의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가치법칙(law of value)’의 작동 여부이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Kritik, des Gothaer Programms)』에서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공산주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 가치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주의 사회 내부에서 생산자는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여기서 생산물에 체현된 노동은 이러한 생산물의 가치로서, 즉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속성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노동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총노동의 구성요소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¹⁾

엔겔스(Engels, 1987)도 『반뒤링론(Anti-Dühring)』에서 뒤링(Dühring)이 ‘상상 속의 사회(Phantasiegesellschaft)’에서 기존사회의 법칙, 즉 가치법칙이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비판하면서, 가치법칙의 작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만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²⁾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에서 상이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가치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해석은 가치법칙이 자본주의와 같이 전체 경제의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계획의 통제하에서 소비

1) Karl Marx,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Marx Engels Gesamtausgabe*, Vol.25(Berlin: Dietz Verlag, 1985), p.13.

2) Friedrich Engels, “Anti-Dühring,” *Marx Engels Werke*, Vol.20(Berlin: Dietz Verlag), p.291.

재부문에 제한적으로 진행된다는 주장이다. 그 반대의 해석은 현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핵심적 증거로서 가치법칙의 관철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북한체제에서도 가치법칙 논쟁이 있었다. 특히 1950~60년대 계획경제의 원형(prototype)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치법칙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³⁾ 일련의 논쟁은 김일성이 1969년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를 발표하면서 일단락된다. 테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은 ‘형태적으로만’ 작동한다. 교환은 존재하지만 가치법칙은 생산을 지배하지 못한다. 생산은 계획에 의해서 관리된다. 1969년 김일성의 테제는 결코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테제는 스탈린이 1951년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 문제(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라는 글과 내용적으로 거의 일치한다.⁴⁾ 스탈린이 가치법칙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 이유는 당시 소련경제에서 ‘계획’이 ‘교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가치법칙이 부분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는 김일성의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의 스탈린주의적

3) 1950년대 가치법칙에 관한 북한의 이론적 논쟁은 다음 논문들을 참조. 최동화,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품 생산 및 가치 법칙 과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의 그의 작용에 관하여,” 『북한관계사자료집』(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윤기복, “공화국 가격 체계와 전후 소매 물가 동태,” 『경제연구』, 제1호(1956); 송예정,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성격,” 『경제연구』, 제1호(1956); 김광순, “우리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확대 공고화를 위한 조선 로동당의 경제정책,” 『경제연구』, 제2호(1956).

4) Joseph Stalin,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72), Stalin Reference Archive Html, <http://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stalin/works/1951/economic-problems/index.htm>.

기원과 성격을 분석하고, 그것이 가지는 정치경제학적 성격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해석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가치법칙에 대한 북한(김일성)의 해석과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해서 독점 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의 작동에 대한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의 작동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이데올로기 정당화를 위해 교환을 제한하고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수정된 형태로 작동하게 된다.

2. 가치법칙의 스탈린주의적 해석

1) 프레오브라젠스키: 사회주의적 본원적 축적단계에서 가치법칙과 계획의 원리 간의 경쟁

프레오브라젠스키(Preobrazhenskiĭ)는 소련경제에는 두 개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법칙은 계획의 원리로서 소련경제의 미래를 표현하며, 또 다른 법칙은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으로서 소련경제의 과거, 곧 ‘가치법칙’이다.⁵⁾ 프레오브라젠스키는 소련경제는 사회주의적 축적이 확립되지 못했으며, 사회주의적 축적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본원적 축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주의적 본원적 축적 단계에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법칙

5) Evgeniĭ Alekseevich Preobrazhenskiĭ, *The New Economic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147.

이 존재하지만 차츰 가치법칙은 소멸하고, 사회주의적 본원적 축적의 법칙이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배 그리고 잉여생산물의 양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⁶⁾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적 상품경제를 특징짓는 것으로, 상품경제는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 이미 위태롭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규모 산업이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손에 있는 곳에서 더욱 심화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련 경제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독점(capitalist monopolism)에서 사회주의적 독점(socialist monopolism)으로의 이행을 추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자본주의적 혹은 국가자본주의적 형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에 전(前)자본주의적 생산의 형태 - 수공업, 때때 농민경제(petty peasant economy), 단순상품생산 - 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치법칙과 계획의 원리는 경쟁하게 된다. 계획의 원리는 통합된 국가 경제의 영역에서, 가치법칙의 원리는 단순 상품생산의 영역에서 각각 생산과 교환의 영역을 지배하게 된다.⁷⁾

2) 스탈린주의

소련 내부에서는 가치법칙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다. 기하라 마사오(木原正雄)에 따르면 소련경제에서 가치법칙에 관한 해석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⁸⁾

6) *Ibid.*, pp.84~85.

7) *Ibid.*, pp.160~162.

8) 木原正雄, 『價値と價格の理論: ソビエト經濟學界の論争と成果』(東京: 有斐閣, 1959); 장찬섭, “소련경제학에서 「가치론」 연구(下),” 『경제학연구』, 제12권 1호(1964), 37~39쪽에서 재인용.

- ① 자본주의나 소련경제를 구별하지 않고 상품생산의 일반의 가치법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상품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추상적 인간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상품은 그 가치를 표현하는 가격으로서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소련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가치와 가격은 반드시 괴리된다는 견해이다.
- ③ 총가치와 총가적이 같다는 마르크스 해석의 응용이다. 개별적 상품의 가격은 그 가치에서 배리(背離)되어 그 가운데 일부는 가치보다 높다. 그러나 가격의 합계는 가치의 합계와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가 소련경제에도 적용되어 가치총량이 가격총액이 같다는 해석이다. 그 이유는 생산수단의 가격은 가치보다 낮은 반면 소비재의 가격은 그것을 상쇄할 만큼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 ④ ③의 해석에 대한 반론의 결과로서 정립된 것이다.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형태를 취하는 소비재에서 있어서는 일정정도 생산의 규제자 역할을 하지만, 국영기업에서 생산되고 국영기업 사이에 유통되는 생산재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규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해석이다. 스탈린주의적 해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 ⑤ 소련경제에서 가치법칙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소련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이나 소비물자도 사적노동의 생산물의 아니고, 사회가 전생산물의 소유자인 한 상품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해석들 가운데 소련경제의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네 번째 해석, 즉 스탈린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1) 스탈린의 1951년 테제

스탈린(Stalin, 2005)은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 문제(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에서 소련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⁹⁾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이 존재하는 곳에

서는 어디에서나 존재해야만 한다. 가치법칙이 작동하는 영역은 소비재 부문이다. 가치법칙은 상품의 순환(commodity circulation)에서만 아니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탈린은 가치법칙 사회주의 생산에서 규제자(regulator)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생산을 지시할 때 가치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소련의 기업에서 비용계산, 수익성, 생산비용, 가격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법칙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는 기능할 수도 없고 기능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다.

스탈린은 가치법칙이 생산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의 기준이 되며, 숨겨진 예비를 찾아내고 생산방법의 개발을 통해서 생산비용을 낮추게 해주기 때문에 나쁜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제는 기업의 관리인(executive)과 계획자가 가치법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스탈린은 가치법칙의 작동이 소련경제에서 생산의 규제자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가치법칙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작동한다. 그 이유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국민경제의 균형발전법칙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스탈린은 가치, 가치형태,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해했다.¹⁰⁾

(2) 스탈린주의 논의의 기초: 라피두스와 오스트로비티아노프의 제3의 해석

라피두스와 오스트로비티아노프(Lapidus and Ostrovityanov, 1929)의

9) Joseph Stalin,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

10) *Ibid.*

논문은 1951년 스탈린 테제에서 상품과 가치법칙에 대한 해석의 기초가 되는 논의이다. 우선 그들은 가치법칙을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대비시킨다.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에서 다양한 생산영역에서 노동의 분할을 규제한다. 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분할은 시장의 교환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소련경제는 이행기적 성격(transitional character)을 가지고 있다. 소련경제는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적도 아니고 완벽하게 사회주의적 경제로 아직 전환되지도 못했다. 소련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기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련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역시 전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의식적인 규제에 의해서 대체되지도 않았다.¹¹⁾

라피두스와 오스트로비티아노프는 소련경제에서 가치법칙에 관한 자신들의 해석을 제3의 해석이라고 규정한다. 소련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가치법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노동 지출(expenditure of labor)’의 법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멸되어 간다.¹²⁾

가치법칙의 구체적 소멸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소련 사회의 과도기적 성격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도기 사회에는 다양한 생산양식이 존재하며, 각각의 생산양식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종합 체제(synthetic system)이다. 만약 소련에서 국가 생산(state production)만 존재한다면, 가치법칙은 작동하지 않는

11) Iosif Abramovich Lapidus and Konstantin Vasil'evich Ostrovitiānov, *An Outline of Political Economy: Political Economy and Soviet Economics*(London: Martin Lawrence, 1929), pp.168~169.

12) *Ibid.*, pp.169~170.

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에 의한 자본주의적 기업, 장인과 수공업적 노동자의 기업, 농장 등 다른 유형의 경제적 기업이 존재한다. 원시적 경제 유형은 상품 생산기업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자포적 단위들(self-contained units)이다. 자본주의적 기업과 소상공생산자들은 가치와 생산가격에 의해서 규제된다. 라피두스와 오스트로비티아노프는 이와 같이 다양한 생산양식의 성격을 가진 경제는 시장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와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노동계급의 경제로서 '논리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요소라는 주장이다. 소련경제의 근본적이고 독특한 현상으로서 국가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예컨대 국가는 농업생산에서 노동도구와 생필품 등을 공급하고 농업생산물을 구매한다. 국가는 시장의 가장 큰 공급자로서 사적경제, 특히 농업생산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주의로의 노정을 이끈다.¹³⁾

또한 라피두스와 스트로비티아노프는 국가의 분배를 독점 자본에 의한 착취와 분배와 구별한다. 이는 가격정책을 통해서 확인된다. 국가는 저가 정책을 취함으로써 농업 부문에 대한 착취보다는 농업의 발전을 위한 축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국가는 시장의 최대 공급자로서 산업과 농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국가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에 이익이 되도록 가격정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그들은 국가는 직접적으로 사적인 교역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3) *Ibid.*, pp.170~172.

경제를 직접 관리하는 행정단위이다. 국가는 고정가격을 정립할 수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자를 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¹⁴⁾

라피투스과 오스트로비티아노프의 이와 같은 인식의 뿌리가 되는 것은 국가의 소유권이다. 국가의 소유권은 시장을 계획의 의도대로 이끌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가치법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치법칙을 조작(manipulation)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⁵⁾

(3) 스탈린주의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와 가치법칙

스탈린주의는 1940년대 정치경제학 교과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44년 『미국경제회지(The American Economic Review)』에 두냐예프스카야(Dunayevskaya, 1944)가 번역하여 기고한 논문은 기존의 정치경제학 교육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특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이 논문이 지적한 내용은 1954년 출간된 소련의 공식적인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반영된다.¹⁷⁾ 이 논문은 현존 사회주의의 주요한 특성으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꼽고 있다. 국가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사회화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힘(force)이 된다. 이는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단순히 국가개입

14) *Ibid.*, pp.173~175.

15) *Ibid.*, pp.175~176.

16) 이 논문은 본래 러시아 저널 *Pod Znamenem Marxizma*(Under the Banner of Marxism)에 익명으로 기고된 글이다. Raya Dunayevskaya, "Teaching of Economics in the Soviet Un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34, No.3(1944), pp.501~530.

17) Ronald Meek, *Studies in the Labor Theory of Value*(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6), p.270.

의 수준(양적 차이)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농업집단화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사회주의 발전의 법칙은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집단화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의 국가경제계획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⁸⁾

두나예프스카야의 기고 논문은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을 부정하는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다. 이 논문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스탈린을 찬양하면서 사회주의의 이익을 위해 가치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존 사회주의에서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노동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을 통한 분배가 어렵기 때문에 화폐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글은 화폐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도구라고 규정하고, 생산물은 통화의 도움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한다. 노동자와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의 임금(노동시간)도 통화의 도움을 받아 계산되고 지불된다.¹⁹⁾

또한 이 기고 논문은 소련 경제에서 상품이 구매와 판매의 대상이라고 적고 있다. 상품 가운데 국가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논문은 소련에서 두 가지 시장과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는 가치법칙을 활용하여 사회적 필요한 생산비용을 토대로 가격을 결정한다. 생산의 사회적 비용은 가격결정의 출발점

18) Raya Dunayevskaya, "Teaching of Economics in the Soviet Union," pp.515~518.

19) *Ibid.*, pp.519~522.

일 뿐, 가격에는 상품생산에 필요한 전체 비용이 포함된다. 국가가 결정한 가격은 국가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가치와 가격이 괴리가 발생한다.²⁰⁾ 소련 사회에서 상품의 유형과 특성은 국가가 결정하고 통제한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가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사용가치만이 중요하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획경제의 리더십이 가치법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비용계산(cost accounting)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소비된 실제 노동단위가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²¹⁾

두냐예프스카야의 번역 논문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를 모두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노동은 사용가치를 생산하고, 추상적 노동은 사회적 생산에 사용되는 총노동의 특정한 비율이다. 그러나 노동의 이중성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기업에 참여하는 개별 노동자의 노동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모든 유용한 노동지출은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그 이유는 모든 사회적 노동이 국가적 수준에서 계획에 따라 조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국민경제에서 가치법칙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가치법칙은 사회주의 하에서도 기능하며 전화된(transformed)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은 국민경제의 계획된 관리라는 조건하에서 그리고 위기로부터 해방된 경제발전의 조건하에서 국가의 의도에 따라 작동한다.²²⁾

20) *Ibid.*, pp.523~524.

21) *Ibid.*, p.524.

22) *Ibid.*, p.525.

3.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1) 이론적 논의와 쟁점: 스탈린주의적 기원과 성격

김일성의 언명으로 시작되는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1992)에서 가치법칙에 관련된 내용은 본질적으로 가치법칙에 대한 스탈린주의적 해석과 같다. 가치법칙이 제한적으로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통제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가치법칙의 '내용적 작용'과 '형태적 작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가치법칙이 작동하는 생산부문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 사회에서 상품-화폐 관계가 실재하고 가치법칙이 작동하는 이유는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성격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성격은 전 인민적 소유 이외의 협동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가 실재하기 때문이다.

리기성의 정치경제학 교과서는 앞에서 언급한 두나예프스카야(Dunayevskaya, 1944)가 번역·기고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하다.²³⁾ 리기성 역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상품은 가치와 사용가치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치는 추상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되지만 추상적 노동은 사적으로 분리된 노동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노동, 사회적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조직화된 노동이다. 여기서 가치법칙은 상품교환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상품의 가치는 가격을 통

23)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I』(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411~412쪽.

24) 위의 책, 405쪽;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해서 나타나며, 가격은 가치법칙의 작동기구로 이해된다.²⁵⁾ 상품 가격의 기초는 사회적 가치, 즉 사회적 필요노동이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은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리기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는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상품생산이 계획화되고 노동지출이 계획적으로 표준화되는 체계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⁶⁾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소유제가 전 인민적 소유로 통일되게 되면 상품의 존재도 가치법칙의 작동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²⁷⁾

과도기가 끝나고 협동적 소유가 전민 소유제로 넘어가서 하나의 소유 형태를 이루게 된다면 그때의 사회생산물은 대외무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이 아니라 그저 생산수단, 소비품이라고 하든지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법칙의 작용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²⁸⁾

또한 김일성은 상품생산과 유통의 영역에서 가치법칙을 “옹게 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²⁹⁾ 김일성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가치법칙

1970), 16쪽.

25) 위의 책, 457쪽.

26) 위의 책, 458쪽.

27)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3(1983), 455쪽.

28) 위의 글, 455쪽.

29) 위의 글, 459쪽.

의 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했다.³⁰⁾ 어쨌든 이 역시 스탈린의 ‘가치법칙의 이용’ 테제와 일맥상통한다. 계획경제의 관리의 문제에서 가치법칙을 통해서 비용계산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³¹⁾

김일성은 생산수단 부문은 소비재와 같이 내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규정한다.³²⁾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소위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을 사회주의 사회만의 고유한 새로운 경제적 관계라고 소개하고 있다.³³⁾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전통적 의미에서 가치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동은 생산과 교환에서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를 단지 계산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이유는 독립채산제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국영기업소 사이에 생산수단의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⁴⁾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동에서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가치 형태로 되며 개별 노동지출은 생산수단의 개별적 가치형태가 된다. 이는 가치법칙의 내용적 작동에서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이 상품의 사회적 가치로, 개별노동지출이 상품의

30) 위의 글, 120~121쪽. 가치법칙에 관한 북한의 이론적 논쟁은 각주 3)에서 언급한 논문들을 참조. 그 가운데 윤기복의 논문은 김일성의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 그 밖의 논문들은 모두 김일성의 논의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31)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I』, 444쪽.

32)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457쪽.

33)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I』, 463쪽.

34)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457~458쪽.

개별 가치가 되는 것과 구별된다.³⁵⁾

김일성과 리기성은 가격의 결정에서 가치관계가 형성되는 상품생산물이나 형태적인 가치관계가 형성되는 형태적인 상품생산물 모두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때 적절한 분배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중 소비재나 생산재 모두 소위 ‘사회주의 기본경제 법칙’에 따라 가치와 가격을 ‘배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⁶⁾ 물론 이론적 맥락에서 가치와 가격의 ‘배리’는 모두 축적과 소비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가치보다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치법칙이 계획의 원리에 따라 규제된 형태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는 ‘인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축적의 가속화를 위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김일성과 리기성의 주장은 현실과는 ‘배리’된 이데올로기적 은폐이다.

2) 가치법칙 논쟁에 배태된 권력투쟁

북한의 정치권력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계획을 매개로

35)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I』, 465쪽. 배리(背離)라는 용어는 마르크스의 가치와 전형에 관한 논의에서 독일어 Abweichung(영어 deviation)에 대한 번역어이다. 국어사전에 ‘배리’라는 단어는 등재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괴리’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背離)과 중국(背离)은 모두 북한과 동일한 한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36)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462쪽;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I』, 460~461쪽.

사회경제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공고히 하려 하게 된다. 권력투쟁이 일단락된 이후 권력의 외연이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산되어 지배질서를 구축하려 한 것이다. 8월 종파사건과 반종파투쟁 이후 김일성계는 권력을 독점하고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려 했다. 공식적으로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성공적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북한의 경제관리이론은 형식적으로는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주체로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한다. ‘정치적 지도’는 경제관리에서 당의 영도를 실천하는 방안이다.³⁷⁾ 정치적 지도는 대중을 수령과 당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들며,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일을 말한다. 다음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경제 내부의 여러 부문과 기업소들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논거이다.³⁸⁾

그러나 지배권력은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계획’의 한계가 분명했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한 잉여생산물의 수취와 배분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사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완충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물론 그 근간은 대안의 사업체계 이후 위계적인 당조직을 이용하는 생산조직의 혁신이었다. 하지만 생산조직의 혁신과 계획의 강화를 통해서 축적의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웠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과학적 계산’을 근간으로 하는 계획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

37)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9쪽.

38) 위의 책, 43쪽.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권력상층부는 경제 조정양식을 둘러싼 노선투쟁을 벌이게 된다. 갑산파는 가치범주와 가치법칙의 수용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반당반혁명 분자들’이 가치법칙을 언급하며 황해 제철소에서 ‘가화폐’를 이용한 물질적 자극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을 주장했다고 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³⁹⁾ 하지만 이미 김일성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제시하면서 ‘이윤’이라는 동기를 통해서 성장을 자극하는 소위 ‘물질적 자극’에 대해서 반대했다.⁴⁰⁾ 갑산파가 가치범주와 가치법칙의 수용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완충기 직후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경공업 부문의 투자 확대는 당과 대중 사이에 잠재적인 정치적 긴장이 실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일성계는 이러한 긴장을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의 형성을 통해서 해소하려 하였으며, 갑산파는 잠재적인 긴장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적으로 균형에 대한 강조의 형태로 나타난다.⁴¹⁾ 둘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도 불구하고 당의

39)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235쪽.

40) 조선로동당 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1-15(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9), 177쪽. 1965년 소련의 경제개혁 조치의 핵심은 이윤(profit)을 근간으로 하는 인센티브 체제를 개혁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Jan Adam, “The Incentive System in USSR: the Abortive Reform of 1965,” *ILR Review*, Vol.27, No.1(1973) 참조. 이와 같은 소련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국내 논의로는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9쪽 참조.

41) 이태섭,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 전략과 수령체제의 확립”(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78쪽.

사회적 통제와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계획내부에 탈중앙집권적 세력들이 존재했으며, 갑산파는 이러한 세력들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산파는 계획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의 한계를 인식했으며 경제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경제적 성과가 미비했음을 말해 준다. 갑산파가 가치범주와 가치법칙의 수용을 주장한 것은 ‘대안의 사업체제’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로 대표되는 생산과정과 생산조직의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성장의 지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결과적으로 갑산파의 도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김일성은 1968년 4월 1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에 이른바 ‘수정주의적 경제리론’이라는 이름으로 갑산파를 비판하고 있다.⁴²⁾ 이 연설에 따르면 갑산파는 사회주의 경제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한해에 기껏하여 6~7%밖에 장성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아주 높은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갑산파의 이러한 인식을 노동시간 감축과 ‘자유화’를 주장하는 노동자를 합리화 해주는 ‘우경기회주의’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수정주의 이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노동자들의 조직동원과 더불어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갑산파는 가치범주와 가치법칙의 수용을 통해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속도의 조절에 대한 주장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속도의 조절은 곧 중공업

4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22(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우위의 축적전략과 대규모 노력동원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 갑산파가 이와 같은 주장을 펼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으로는 1960년대 경제위기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조직의 혁신과 계획의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문제가 지속됨으로써, 갑산파는 가치 법칙의 수용과 함께 기본의 발전전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리마 운동과 연계시켜 갑산파를 수정주의 이론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갑산파는 노동동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³⁾

갑산파가 속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노동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은 갑산파의 도전이 단순히 권력상충부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투쟁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1950년대 중공업 우선전략에 대한 소련계와 연안계의 도전이 그러하듯이, 갑산파와 권력투쟁 역시 아래로부터의 불만이 내재해 있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시기 속도의 문제는 천리마 운동이라는 노동동원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공청능력’과 ‘로력의 수’를 감안하지 않고, 노동력의 절약과 생산성 증가를 강제하는 데에 대한 불만 혹은 반발이 존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⁴⁴⁾

43) 김일성은 이에 앞서 1967년 7월 3일 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가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반대하고 천리마 운동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김일성,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360쪽). 또한 『조선전사』 31권에는 ‘수정주의 경제이론’이 천리마운동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8쪽).

44) 1967년 12월 18일 내각 제1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수정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력의 절약과 정치사업을 통한 대중동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

김일성계의 입장에서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것을 주장하는 갑산파의 주장은 대규모 투자의 확대와 노동동원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김일성계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의 문제를 대안의 사업체제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로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당 경제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과 다름없다. 조직혁신이나 계획의 성격변화가 결국 경제위기의 문제를 중하위 관료와 대중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면, 갑산파의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제성장의 지체가 지속되는 문제의 원인을 경제정책의 오류와 관련하여 지배권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결국 김일성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당내에서 갑산파를 제거했다.

하지만 계획과 가치법칙을 둘러싼 노선투쟁은 1967년 갑산파의 숙청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김일성은 1969년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이론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이라는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계획의 한계를 일정정도 인정하였다.⁴⁵⁾ 본래 이 명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상품인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의 이유에 대해 스탈린의 설명을 상당부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⁴⁶⁾ 사회적 분업과 사회주의 내부의 다양한 소유 형태의 존재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소유권의 변동은 실재하기에 상품은 존재하며 가치법칙은

성, “공화국 정부의 10대 정강을 집행하기 위한 내각의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568~569쪽.

45)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453~465쪽.

46) 스탈린이 가치법칙이 소비재에 제한적으로 작동하지만 그것은 생산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경계했다면, 김일성은 ‘형태적 작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했다.

작동한다. 하지만 국영기업소 내에서 생산수단과 원료 및 자재는 국가 소유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다. 다만 상품적 형태를 이용한 것으로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만 작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을 이용하는 이유는 등가계산을 통해 본위주의를 막고 사회주의 분배법칙에 따른 노동에 대한 분배를 위해서이다.

물론 김일성의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생산수단 부문에서 화폐-상품관계가 형태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설명은 인정하기 어렵다. 화폐-상품관계를 곧 가치법칙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상품관계가 ‘형태적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⁴⁷⁾ 북한을 비롯한 현존 사회주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치법칙’의 개념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의 가치법칙 개념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치법칙 개념에는 권력의 의도에 의해서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이 ‘맹목적’ 성격이라면, 자기체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개별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집권적 경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계획을 통해서 그러한 경향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는 권력의 의지일 뿐이며 경제적 현실은 아니다. 시장의 요소는 불가피하게 개별 행위자의 탈중앙집권화 경향을 발생시키며, 현존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을 수용한다는 점은 계획으로 그러한 경향을 조정·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47) 이정철은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과 가치법칙의 전면화를 구별하고 있다. 그는 가치법칙의 전면화는 ‘시장관계의 전면화’와 동의어로 그리고 가치법칙의 강화를 통한 균형론은 신고전파적 균형이론의 귀결로 이해한다.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79쪽.

김일성의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한계’를 말해 주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계획을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음을 인식한 것이다. 사회경제 부문이 실제로는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정치권력은 제한적이지만 ‘아래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한은 공식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기관과 관료의 본위주의 때문에 그리고 노동의 통제를 위해서 가치법칙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역으로 이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해서는 중간관료와 노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의 자율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은 제한적인 중하층 관료와 노동계급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성립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것이 권력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성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갑산파는 숙청되었지만 그것이 곧 당과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정치적 긴장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권력과 탈중앙집권적 경향을 가진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중재’된 결과물이다.

4. 북한의 가치법칙의 작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독점 자본주의와의 비교

이론적 맥락에서 현존 사회주의 경제 가운데 하나인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이 관철 여부에 대한 논의는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하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래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으로서 상품의 가격은 내재해 있는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가격은 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 있으며, 이는 가치법칙이 계획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북한경제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의 형성은 단지 계획을 통해서 국가의 규제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가 된다면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는 발표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경제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은 생산부문의 불균형과 수요의 부족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계획경제에서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의 수준은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자본주의가 저성장 국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높지 않았다.⁴⁸⁾ 또한 임금 역시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지불되었다. 특히 북한경제는 다른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배급제가 오랫동안 유지됨으로써 국가가 지속적으로 수요를 억제했다. 또한 사회적 노동의 배분은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적 필요노동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권력이 스탈린의 1951년 테제 이후 가치법칙의 작동을 인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물계획이 한계에 부딪혔으므로 가치법칙과 가치법칙의 수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⁴⁹⁾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학 교과서들이 화폐-

48) 1930년대 현존 사회주의 경제는 서구 자본주의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반면 소련은 자본계수(capital-output ratio, capital coefficient)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경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Hartmut Elsenhans, *State, Class and Development* (New Delhi: Radiant Publishers, 1996), p.144 참조.

49) Peter Henricke, “Probleme einer Kategorialen Bestimmung der Über-

상품관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지배권력이 가치법칙의 작동을 계획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는 명제를 통해 정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입장에서서는 가치법칙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가치법칙이 계획을 통해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계획과 시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스탈린과 김일성 등 현존 사회주의의 지배권력이 가치법칙의 제한적 작동을 주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계획 내부에 존재하는 탈중앙집권적 요소들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가치법칙의 작동은 자율적인 교환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아래’의 이해관계가 계획이 아니라 교환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지배권력이 가치법칙 작동을 시인하는 일은 계획 내부에 탈중앙집권적 요소들이 실재한다는 객관적 현실을 인식하고 계획의 원리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원칙적으로 경쟁 자본주의에서와 같이 가치법칙의 작동은 증명되기 어렵다. 페테르 헨니케(Peter Henricke)와 힐렐 틱틴(Hillel Ticktin)과 같은 서유럽의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치법칙의 작동 혹은 수정된 형태의 가치법칙의 작동을 인정하지 않는다.⁵⁰⁾ 하지만 현존 사회주의에서 계획과 명령에서 벗어난 교환이 실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생산이 당과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직접적으

gangsgesellschaft,” *Probleme des Sozialismus und der Übergangs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pp.86-87.

50) *Ibid.*, pp.107-108; Hillel Ticktin,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the USSR,” *Critique*, Vol.1, No.1(1973), pp.36-38.

로 통제된다고 하지만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환은 불가피했다. 당과 국가는 완벽한 계산을 공언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생산재 생산부문에 집중하게 되면서 생산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했고, 대중은 식료품과 소비재의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교환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계획시스템의 결과로 발생했다. 즉, 현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정치적인 이유와 더불어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정된 형태로 작동했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점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의 성격에 대한 논의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가치법칙을 가치와 가격 혹은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할 때, 독점 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은 작동하지만 가치와 생산가격의 괴리 그리고 부등가 교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가치법칙의 수정(metamorphosis)이다. 1960년대 폴란드의 대표적인 정치경제학자 브워지미에시 브루스(Włodzimierz Brus)는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법을 현존 사회주의에 적용한 바 있다.⁵¹⁾ 현존 사회주의 교환은 경쟁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국가에 의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 자본주의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 사회주의의 국민경제에서 생산은 기본적으로 당과 국가가 수립한 계획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생산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 힘들다. 농업의 집단화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해서, 생산은 집단농장과 국영기업이 담당한다. 이러한 측면은 독점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측면과 유사하다. 물론 수입을 통한 공급 역시 가능하다. 현존

51) Włodzimierz Brus,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London: Routledge, 1972), pp.93~95.

사회주의 진영 간의 무역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진영과의 무역도 부분적이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세계시장과의 교역으로 세계시장 수준에서 가치법칙이 작동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⁵²⁾

북한경제 역시 기본적으로 현존 사회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해서 생산은 기본적으로 국영기업소가 담당한다. 공장과 기업소의 운영은 대안의 사업체계 이후 ‘당위원회’가 직접 담당했다. 당의 계획은 기업소에 전일적이고 유기적인 명령체계에 따라 생산조직에 전달되고, 개별 생산단위는 그 명령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계획은 정확하지 않다. ‘잉여’와 ‘부족’이 공존하며, 교환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정치는 직접적으로 교환에 개입하고 가격결정에 참여한다.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 특히 소비재 부문에서 교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가는 소비재의 가격결정에서 의도적으로 가치와 가격을 괴리시킨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중공업 우위의 축적노선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소비재 부문에서 가치와 가격을 괴리시킴으로써 축적률을 높이려 했다.

자본주의에서도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독점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자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 시장의 독점은 경쟁자본주의에서도 나타나지만

52) 토니 클리프(Tony Cliff), 『소련 국가자본주의』, 정성진 옮김(서울: 책갈피, 1993), 154~156쪽. 물론 세계적 수준에서의 가치법칙의 작동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쟁은 Gunther Kohlmey, “Karl Marx Theorie von den Internationalen Werten,” *Probleme der Politische Ökonomie*, Bd.5(Berlin: Akademie Verlag, 1962); Klaus Busch, Wolfgang Schöller, und Frank Seelow, *Weltmarkt und Weltwährungskrise*(Bremen: Kuhlmann, 1971); Christel Neusüss, *Imperialismus und Weltmarktbeugung des Kapitals*(Erlangen: Verlag Politladen, 1972) 참조.

일시적인 것인 반면 독점자본주의에서는 지속성을 가진다. 독점자본주의에서는 독점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권력을 이용하여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를 발생시킨다. 미크(Meek)는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이행단계, 경쟁단계, 독점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독점단계에는 특유한 생산관계가 잉여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이윤에 포함됨으로써 ‘수정된 공급가격(modified supply price)’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설명한다.⁵³⁾ 또한 스위지(Sweezy)는 독점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적 법칙의 일부는 변경되고, 또 다른 일부는 수정된다고 보았다.⁵⁴⁾ 그는 “집적과 독점적 합병(merger)에 관한 마르크스(Marx) 이론의 실현은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의 무효화(invalidation)를 초래하는 것 같다”는 루돌프 힐퍼딩(Rudolf Hilferding)의 언급이 명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독점적 조건에서 교환비율은 노동시간 비율과 일치하지 않으며, 생산가격과 같이 노동시간의 비율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공급을 제한하는 힘이 생산자의 수중에 있을 때, 생산자는 가격을 결정하는 힘 역시 가지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일반화를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독점의 요소가 도입될 때, 균형 산출량은 더 적어지고 균형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점은 대부분 일반적이고 정확한 사실이다. 경쟁가격과 독점가격의 괴리에 대해서도 독점이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정치경제학자 엘마르 알트파터(Elmar Altvater)는 독점 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다. 독점 자본주의에

53) Ronald Meek, *Studies in the Labor Theory of Value*, pp.296~298.

54) Paul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pp.270~272.

서 경쟁 자본주의에서처럼 모든 개별 자본이 평균이윤율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독점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의 행위에는 한계가 없다. 권력(Macht)의 범주가 경쟁을 통해서 생산양식에 존재하는 강제적 법칙(이윤율의 균등화)과 개별자본의 행위(이윤의 극대화)가 중재되던 것을 붕괴시킨다. 그 결과 마르크스에 의해서 정립된 범주의 수준에서 변화를 발생시키게 된다. 각각 생산가격은 독점가격으로, 평균이윤은 독점이윤으로, 평균이윤율은 이윤율의 위계(Hierarchie der Profitraten)로, 초과이윤은 고정적 초과이윤으로, 가치법칙은 경제외적·경제적 권력(Macht)과 강제력(Gewalt)으로 변환된다.⁵⁵⁾

독점의 발생과 함께 평균이윤율이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곧 이는 독점자본주의에서 생산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독점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의 작동 여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된다. 이에 대한 5가지 이해가 존재한다.⁵⁶⁾ 첫째, 만델(Mandel, 1972: 475)은 독점적 평균이윤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독점과 비독점 분야의 이중적 평균이윤율을 주장한다. 이는 독점부문에서 평균이윤율이 성취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독점 부문과 비독점부문의 상호관계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비독점부문에서 평균이윤율이 형성되지만, 독점부문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월스너(Oelßner 1960: 84)는 한편으로 가치법칙이 다른 한편으로 권력이 나란히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 독점의 지배력에 따라 어떠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힐퍼딩은 카르텔의 형성으로 인해서

55) Elmar Altvater, "Wertgesetz und Monopolmacht," *Das Argument*, Vol.6(1976), pp.153~154.

56) *Ibid.*, pp.166~176.

독점이윤의 지속을, 스위지(Sweezy, 1956: 273~274)가 확산(spreading)을 주장한 반면 외젠 바르가(Eugen Varga)는 경쟁은 경제적 지배력을 제한하고, 독점의 지위를 소진시키고 폐지시킨다고 주장한다. 셋째, 독점의 발생과 함께 평균이윤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개별자본의 이윤율 간의 위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⁵⁷⁾ 독점은 자유로운 경쟁을 지양하며, 자연히 경쟁을 통한 평균이윤율의 형성과 이윤의 분배를 붕괴시킨다. 경제적 그리고 경제외적 권력과 강제력이 경제적 법칙의 집행자(Exekutor)가 된다. 평균이윤율이 더 이상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이윤극대화의 추구는 개별 자본의 모티브가 되어 지속적으로 독점자본주의를 규정하게 된다. 넷째, 경제적 그리고 경제외적 권력과 강제가 이윤분배의 집행자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국가 개입으로 현상화된다는 설명이다. 국가는 가치법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법칙이 관철되는 경향을 저지한다. 이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로 나타난다.⁵⁸⁾ 마지막으로 독점 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이 완전히 지양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지라는 해석이다. 독점은 단지 가치법칙이 관철형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수정할 뿐이라는 주장이다.⁵⁹⁾

북한을 비롯한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교환과 가치법칙의 작동은 독점 자본주의와의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첫째, 생산자(공급자)의 수가 제한된다. 독점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에 의해서 공급이 제한된다면, 계획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해서 국영기업이 공급을 조절한다. 둘째,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자본주의에서 가격은 생산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독점자본주의에서는 공급

57) *Ibid.*, pp.171~173.

58) *Ibid.*, pp.173~175.

59) *Ibid.*, pp.175~176.

자가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독점자본은 시장과 교환을 지배하는 권력이다.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당과 국가가 가격을 결정한다. 당과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당과 국가는 정치권력이면서 동시에 경제사회적 지배권력이다. 물론 독점자본 역시 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에, 가격 역시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결정된다. 반면 현존 사회주의에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윤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정된다. 정치적 목적의 근간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권력은 교환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체성에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셋째,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 독점 자본주의에서 경쟁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정상적인 가치법칙이 작동할 수 없는 것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결과이다. 반면 현존 사회주의에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산과 분배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이다. 생산에 대한 개입은 소비재 부문의 교환을 제한하고 축적에 관한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정치권력은 교환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부합하지 않는 경제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윤리적으로(혹은 법적으로) 교환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자원분배를 명목으로 가치법칙에 의한 자원분배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분배과정에 개입한다. 브워지미에시 브루스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일정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가치법칙이 언제나 바람직한 자원분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와 같은 경우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오히려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에서 적극적 가격정책(active price policy)으로 인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익과 손실이 하나의 소유자, 즉 국가의 수중에 있기 때문

에 한 지점에서 감소된 이윤이나 손실은 상응하는 또 다른 지점에서 보완된다. 또한 가치와 가격의 괴리는 도시와 농촌 혹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분배를 가져온다. 그리고 적극적 가격정책은 가치법칙에 의해서 결정된 것과는 다른 노동분업을 유도한다.⁶⁰⁾ 물론 현존 사회주의 내부에서 탈스탈린화 이후 심각한 이론적 논쟁이 존재한다.⁶¹⁾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정치적으로’ 수정되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존 사회주의 경제는 독점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교환이 부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가격이 당과 국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당과 국가가 교환을 제한하려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생산조직과 대중들은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과 국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시도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부족(shortage)’ 때문이다. 특히 생필품의 부족이 심각했다. 당과 국가는 계획의 완벽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부족은 북한을 비롯한 거의 모든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다. 코르나이(Kornai)는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부족(shortage)’과 ‘잉여(surplus)’가 공존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⁶²⁾

60) Włodzimierz Brus,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pp.104~115.

61) 1960년대 탈스탈린화(destalinization) 이후 가치법칙의 효과성에 대한 폴란드 정치경제학자들 간의 논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Ibid.*, pp.98~104 참조.

62)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243~245. 동유럽의 경우 탈스탈린주의적 부분 개혁조치가 실행된 이후에도 필요(needs) 구조와 생산구조 간의 불비례는 해결되지 않았다. 가치와 가격의

그래서 개별과 생산조직과 대중은 교환을 시도했고, 개별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교환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환은 현물 중심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도 엄연히 존재했다. 부족의 상황에서 발생한 교환은 ‘위의 명령’이 가진 한계를 말해 주면서 동시에 ‘아래’가 ‘위’의 뜻과 배치되기에 언제나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위이다. 이러한 교환은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대표되는 개혁과 개방 조치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북한에서도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래가 스스로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환은 경쟁자본주의에서의 가치법칙 작동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교환은 자본주의적 경제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계획경제의 제도적 혹은 구조적 한계로부터 발생한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에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가치와 가격의 괴리는 권력이 선택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수정된 형태로 작동한다고 정의하고자 한다.

괴리가 발생한 궁극적인 이유는 국가가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불비례를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Włodzimierz Brus,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p.115, pp.124~125, p.194).

5. 결론

김일성은 1969년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 테제를 발표했다. 이 테제는 김일성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스탈린은 1951년 가치법칙의 제한적 작동을 인정하는 글을 발표하게 된다. 스탈린의 이러한 해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1920년대부터 소련 내부에서 가치법칙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의견 가운데 하나를 스탈린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51년 스탈린의 테제는 독단적인 해석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 해석이다. 이러한 스탈린주의적 해석은 1969년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에서도 발표된다. 물론 김일성의 테제는 북한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테제는 윤기복이 1956년 『경제연구』에 발표한 논문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김일성이 이 테제를 발표하게 된 것은 북한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해서 계획경제 시스템의 원형이 완성되었지만, 중앙집권적 성격의 현물계획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갑산파와의 노선투쟁이 발생하게 되고, 1967년 수정주의 경제이론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갑산파는 숙청된다. 하지만 교환과 가치법칙의 작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김일성은 1969년 테제를 발표하게 된다. 김일성 테제를 북한의 해석대로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스탈린주의적 해석을 모방한 김일성의 주장처럼 가치법칙의 작동이 권력이 요구하는 데로 소비재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치법칙의 작동은 사실 교환의 무정부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경제에는 중앙집권적 계획과 탈중앙집권적 요소가 모두 공존하기에 가치법칙은 수정된 형태로 작용한다. 가치법칙의 수정된 형태로 작동하

게 된 이유는 한편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과 명령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북한체제에서 가치법칙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수정된 형태로 작동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가치법칙에 관한 이 논문은 시론적 연구이다. 앞으로 북한체제의 가치법칙의 작동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 브워지미에서 브루스는 현존 사회주의에서 가치법칙 개념이 이론적으로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때, 그러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⁶³⁾ 게다가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계획이 유명무실해지고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 역시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법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현존 사회주의에서 상품은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성격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상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없었다. 스탈린과 김일성은 상이한 소유형태에서 교환되는 생산물을 상품으로 정의했으며, 소유제가 전 인민적 소유로 통일 되면 상품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⁶⁴⁾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상품의 가치는 교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의 실체는 교환을 통해서 확인되지만, 인간의 추상적 노동은 생산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북한의

63) Włodzimierz Brus,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 pp.90-96.

64) Joseph Stalin,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455쪽.

유통과 생산과정 모두가 변화되고 있다. ‘돈주’(신흥 부유계층)는 시장의 유통과정을 독점함으로써 부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 최근 돈주가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고용관계 역시 부분적이지만 차츰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가치법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 자본주의와 함께 주변부 자본주의(peripheral capitalism)에서의 가치법칙 작동에 관한 이론적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존 사회주의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과 같이 시장개혁 조치 이후에 기술혁신, 노동집약도, 총노동시간의 분배가 역동적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시장개혁조치는 없었지만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기에 이 과정에서 생산성, 자본집약도, 설비가동률 등이 변화되었을 것이며, 그 결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역시 변화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화 과정에서 여전히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권력과 ‘돈주’의 결탁으로 인한 시장독점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장화를 무조건적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시장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시장(장마당)은 처음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인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치권력 역시 필요에 따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시

장화가 곧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북한경제와 체제의 성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3대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정치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계획과 시장의 공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위기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위기가 올 때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권력의 의지대로 ‘정면돌파’가 불가능하다. 북한의 지배권력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권력은 현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기존의 노선을 부정하거나 비판하기도 어렵다. 세습된 권력의 딜레마이다. 그래서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의 성격을 이해하고 정치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북한연구에서 사회과학 이론은 권력으로 윤색되어 은폐된 현실을 찾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 접수: 9월 17일 / 수정: 11월 30일 / 채택: 12월 8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I』(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관리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조선로동당 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1-15(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9).

2) 논문

김광순,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확대 공고화를 위한 조선 로동당의 경제정책,” 『경제연구』, 제2호(1956).

김일성, “공화국 정부의 10대 정강을 집행하기 위한 내각의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_____,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22(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_____,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3(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_____,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송예정,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성격,” 『경제연구』, 제1호(1956)

윤기복, “공화국 가격 체계와 전후 소매 물가 동태,” 『경제연구』, 제1호(1956).

최동화, “사회주의 하에서의 상품 생산 및 가치 법칙 과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의 그 의 작용에 관하여,” 『북한관계사자료집』(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서울: 해냄, 2004).

정운영, 『노동가치이론 연구』(서울: 까치, 1993).

토니, 클리프(Tony Cliff), 『소련 국가자본주의』. 정성진 옮김(서울: 책갈피, 1993).

2) 논문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태섭,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 전략과 수령체계의 확립”(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장찬섭, “소련경제학에서 「가치론」 연구(下),” 『경제학연구』, 제12권 1호(1964).

3. 국외 자료

1) 단행본

Busch, Klaus, Wolfgang Schöller und Frank Seelow, *Weltmarkt und Weltwärtsbringerkrise*(Bremen: Kuhlmann, 1971).

Brus, Włodzimierz, *The Market in a Socialist Economy*(London: Routledge, 1972).

Elsenhans, Hartmut, *State, Class and Development*(New Delhi: Radiant Publishers, 1996).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Lapidus, Iosif Abramovich and Konstantin Vasil'evich Ostrovitiĭanov, *An Outline of Political Economy: Political Economy and Soviet Economics*(London: Martin Lawrence(1929).

Kohlmey, Gunther, “Karl Marx Theorie von den Internationalen Werten,” *Probleme der Politische Ökonomie*, Bd.5(Berlin: Akademie Verlag, 1962).

Meek, Ronald, *Studies in the Labor Theory of Value*(New York: Monthly Review

Press(1956).

Neusüss, Christel, *Imperialismus und Weltmarktbeugung des Kapitals*(Erlangen: Verlag Politladen, 1972).

Preobrazhenskii, Evgenii Alekseevich, *The New Economic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1966).

Sweezy, Paul,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New York: Monthly Review Press(1956).

2) 논문

Adam, Jan, “The Incentive System in USSR: the Abortive Reform of 1965,” *ILR Review*, Vol.27, No.1(1973).

Altwater, Elmar, “Wertgesetz und Monopolmacht,” *Das Argument*, Vol.6(1976).

Dunayevskaya, Raya, “Teaching of Economics in the Soviet Un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34, No.3(1944).

Engels, Friedrich, “Anti-Düring,” *Marx Engels Werke 20*, Berlin: Dietz Verlag (1975).

Hennicke, Peter, “Probleme einer Kategorialen Bestimmung der Übergangsgesellschaft,” *Probleme des Sozialismus und der Übergangs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1973).

Marx, Karl,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Marx Engels Gesamtausgabe 25*, Berlin: Dietz Verlag(1985).

Ticktin, Hillel,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the USSR,” *Critique*, Vol.1, No.1 (1973).

3) 기타

Stalin, Joseph,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72), Stalin Reference Archive Html, <http://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stalin/works/1951/economic-problems/index.htm>(검색일: 2020년 8월 10일).

Stalinist Origin and Political-Economic Characteristics of Kim Il Sung's Thesis on Formative Operation of the 'Law of Value'

Yoon, Cheol Gee(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 main issue of socialism has been whether the 'law of value' operated or not.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was signed, debates took place in North Korea as to whether the law of value operated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theoretical debates escalated into political policy struggle, which ended once Kim Il Sung presented his ideas on the operation of the 'law of value' in 1969. Kim thought that the law of value only operated 'formatively' in the exchange of consumer goods. Kim Il Sung's thesis quite similar to the one presented by Joseph Stalin in 1951. Kim's thesis is not as unique as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ists stress; rather, Kim's thesis is based on an interpretation of the Stalinist doctrine. Kim's thesis argues why exchanges and the law of value operate within a limited area under an extant socialist society's centralized planned-economy system. Exchanges and the law of value operate differently in socialist and

capitalist systems. Political power intervenes in deciding prices so that politics intendedly brings out gaps between value and price. These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o monopoly capitalism. However, there is exchange because of the structural (or institutional) limits of the centralized planned-economy system under an extant socialist economy. Accordingly, this study defines that the operation of the law of value is modified ‘politically’ and ‘structurally’ in the North Korean economy.

Keywords: law of value, law of value in extant socialism, formative operation of the law of value, Stalinism, modified operation of the law of value